

비노 '당무복귀'... 새정치에 부는 화합무드

주승용, 최고위원직 복귀... 박지원, 안보 특위 위원장 맡아

호남권 '反文정서' 완화... 신당 추동력·계파갈등 약화 주목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이 사퇴 108일만에 수석 최고위원직에 복귀하고 박지원 전 원내대표도 지난 2·8 전당대회 이후, 처음으로 당직인 한반도 평화·안보 특위 위원장을 맡음에 따라 4·29 재·보궐 선거 참패 이후, 계속됐던 당내 갈등 기류가 해소되고 화합 무드가 조성될지 주목된다.

주승용 최고위원의 복귀와 박지원 전 원내대표의 당직 수락의 의미는 남다르다.

두 사람 모두 호남 정치권을 상징하는 인사들로 문재인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친노 진영과 각을 세우는 비노계의 대표 주자들이기 때문이다.

주 최고위원은 4.29 재보궐 선거 이후, 문 대표에 선거 패배의 책임을 묻고 친노 패권주의 청산을 요구하는 등 대립 구도를 이어왔으며 박 전 원내대표도 각종 당내 현안과 관련, 친노 진영 견제와 비판을 주저하지 않았다.

이들의 당무 참여는 호남에서의 반문(반 문재인) 정서 완화를 물론 신당 및 분당의 추동력을 약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반영하듯, 문 대표는 그동안 수차례 주 의원에 최고위원직 복귀를 설득했고 박 전 원내대표에게도 당직을 맡아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했다.

일단 주 최고위원의 복귀와 박 전 원내대표의 당직 수락에 전제적인 당내 분위기는 밝은 상황이다.

24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 최고위원의 복귀와 관련, 문 대표는 "열심히 혁신하고 있지만 아직 충분하지 못하다"며 "주 최고위원의 복귀를 계기로 더 단합하

고 혁신해 국민·당원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오영식 최고위원은 "당의 혁신과 통합을 위해 큰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한다"고 했고, 유승희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가 꼭 차고 활기 넘치는 것 같다"고 밝혔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도 전날 설치된 한반도 평화·안보특위 위원장 자격으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처럼 계파 간의 불협화음을 뛰어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주 최고위원의 당무 복귀와 박 전 원내대표의 당직 수락이 비주류의 문 대표 체제에 대한 전폭적 지지를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듯 주 최고위원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계파 간 신뢰 형성이 중요하다. 최고위원 간에도 갈등이 없어야 한다"며 '신뢰'를 강조했다.

혁신위원회 활동에 대해 주 최고위원은 "일단 힘을 실어주고 돕는 게 맞다"면서 "사건건 말하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고 마지막에 보완할 게 있을 것"이라고 말해 '어운'을 남겼다.

박 전 원내대표도 당직을 맡기는 했지만 친노 주류 세력에 대한 견제는 계속할 태

세다.

이날 문 대표가 남북 고위급 접촉과 관련, 협상 상황에 대해 정치권과 국민이 알지 못해 안타깝다는 입장을 나타내자 박 전 원내대표는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언론에 알려주면 화답이 깨진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는 새정치연합의 통합은 결국 내년 총선 공천의 틀을 정하는 혁신위의 최종 개혁안에 달려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혁신위가 비노계가 수용할 수 있는 개혁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당내 분란은 결국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국회의원 수 300석 합의 철회를”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광주시당 당직자들이 24일 오후 새정치민주연합 광주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국회의원 정수 300석 합의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정치권, 국립대 총장직선제 쟁점 부상

부산대 교수 투신 사망 계기

교문위서도 여야 치열한 공방

대학 총장직선제 사수를 주장하며 투신한 부산대 교(敎) 교원들 교수 사건으로 국립대 총장 선출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24일 전체회의에서는 대학 총장직선제 문제를 놓고 여야간에 공방이 벌어졌다.

새누리당은 직선제의 폐해로 국공립 대학에서 간선제가 도입된 만큼 당장 직선제로 전환은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을 포함한 야당은 '2014 회계연도 결산'에 '교육부가 대학 재정사업 지원을 밑미로 자율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부대의견 포함을 촉구하며 간선제 폐지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의 재정사업과 교육부의 정책을 연계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판례를 들어 법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간선제가 유지되고 있다고 답했다.

새누리당 신상범 간사는 "지난 1992년부터 사회 민주화 분위기에 맞춰 총장직선제를 했는데 자다가 공인할 정도로 부작용이 많았다"면서 "직선제로 다시 전환하자고 하지만 어느 제도가 좋다고 확신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김태년 간사는 "교육부가 대학 총장 직선제를 간선제로 바꾸려는 노력을 집요하게 한 것은 사실"이라며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학칙 개정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것은 위법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황 부총리는 "국립대학 운영성과 제고와 선진형 대학을 위해 재정사업과 (교육부 정책)을 연계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례가 있다"면서 "어떻게 방안을 만들 것이냐는 문제는 총학이 스스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회의는 국회와 세종청사간 영상회의를 통해 진행됐다. 국회와 정부간 실무 업무 협의를 제외하고 상임위 전체회의가 영상회의로 진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계특위, 초과된 후원금 이월허용 법안 의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계특위)는 24일 정당·정치자금법심사소위원회 열고 연간 한도액을 초과해 후원금을 모금한 경우, 이를 다음 해로 이월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전체회의로 넘겼다.

하지만, 소위는 편법적인 모금을 방지하고자 초과 모금액은 모금 한도액의 20%를 넘을 수 없도록 했다.

현행법은 후원회가 연간 모금할 수 있는 한도액(국회의원의 경우 1억5000만원)을 법률로 정하고, 모금 한도액을 초과해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소위는 개인이 한 해 10만원이 넘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경우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3000만원 초과할 경우 초과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 공제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와 함께 소위는 정당의 당내 경선과정에서 당 대표 외에도 선출직 최고위원 등 '중앙당 최고 집행기관'의 구성원을 선출하기 위한 당내 경선 후보자에 대해서도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새정치 "YS도 같은 뿌리"... '영남개혁세력' 복원 시도

야당 60년사에 3당 합당前 민주화투쟁 포함·기념행사 초청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는 9월18일 창당 60주년 선포식 때 김영삼(YS) 전 대통령을 초청하는 등 상도동계 인사까지 정통 야당 60년사의 '축보'에 포함하기로 했다.

1955년 신익희 선생, 조병옥 박사 등이 주도해 만든 민주당을 현재 정통 야당의 모태로 보는 새정치연합으로서 야당사 정리 과정에서 YS를 빼놓기 힘들다. YS는 고(故) 김대중(DJ) 전 대통령과 더불어 70~80년대 유신과 군사독재 정권 때 민주화 운동의 최전선에 섰던 야권의 지도자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3당 합당으로 YS는 야당의 길을 벗어났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3당 합당 이전까지의 YS에 대해서는 같은 뿌리의 지도자로서 인정하자고 결론 낸 상태다.

이에 따라 3당 합당 이전 YS의 활약상을 야당사에 그대로 담는 한편 사진전 때도 당시 사진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YS의 정치적 동지였던 상도동계 중 현재 새누리당에 몸담지 않은 인사들에게도 6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을 맡기거나 기념식 초창장을 전달하는 것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대표 측이 YS까지 포함하는 영남 개혁세력 복원을 대권 플랜의 일환으로 공을 들이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그러나 창당 6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장이 전병헌 최고위원은 24일 "정치적 외연 확대에 방점이 찍히면 효과가 반감되고 의미도 퇴색된다"며 "이번 사업은 민주·민생·통일을 일관되게 내건 민주당 60년사를 통해 야당의 정체성을 분명히 세우는 쪽에 초점이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새정치연합의 YS 끌어안기는 상도동계 대부분이 현실 정치권에서 은퇴한데다 현역 정치인 중 핵심이라 할 수 있

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등이 여권에 몸담고 있어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도동계 또한 새정치연합이 주도하는 방식의 야당사 정리는 썩 달가워하지 않는 인상이다.

YS의 차남 김현철씨는 "아버지 역시 야권의 지도자였던 것은 사실"이라며 "야당사 정리는 특정정당이 주도할 것이 아니라 학계 등 각계각층이 주도하고 정당이나 상도동, 동고동이 동참하는 방식이 돼야 객관성과 설득력을 지닐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전병헌 최고위원으로부터 추진위원을 맡아달라는 부탁을 받았지만 이 같은 의견을 제시하며 거부했다고 전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회원전용신용대출

최대 5,000만원

까지

* 신용상태등 당사가 정하고 있는 조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산맞공제 2,500억 조기달성 기원 행운 이벤트

▶ 대상

1. 자동차 3년 이상 신규 신청 고객 - 1장 (7년 이상 2장)
2. 전자금융 (인터넷, 텔레뱅킹) 신청 AND 체크카드 신규 발급고객 - 1장
3. 정기예탁금 신규 및 재예치 고객 - 1장(1천만원 이상)
4.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가입 고객 - 1장
5. 정기적금 신규 가입 고객 - 1장(1회 불입금 30만원 이상)
6. 신규 공제 가입 대상 고객 - (초회 공제 5만원 이하 - 1장, 10만원 이하 - 2장, 10만원 이상 - 3장)
7. 카드결제 계좌 변경 - 2장 및 급여계좌 변경 고객 - 1장

▶ 행사기간

2015. 04. 06 (월) ~ 2015. 11. 30. (월)

▶ 당첨일

2015. 12. 01(화) 본 금고 본점에서 추첨 - 당첨자 개별통보 및 공고문 게시(경철입회 하 추첨 예정)

▶ 경품안내

* 1등 - 순금 골드바(1명)	* 4등 - 족욕기(10명)
* 2등 - 의류 스타일러(1명)	* 5등 - 백화점 상품권(20명)
* 3등 - 아이패드(3명)	* 행운상 - 온누리 상품권(40명)

▶ 주의사항

1. 미성년자는 추첨대상에서 제외.
2. 경품 중복 당첨 시 상위 상품에 대하여만 지급.
3. 추첨일 당일 행운권 교부 대상 조건 유지자에 한 하여 지급되며, 미 유지시 경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상기 이외는 실제 상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신만만자유예탁금 - 하루만 맡겨도 최대 1.7% 이율 적용

(금액 단계별 차등이율이 적용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빛고을새마을금고

본점 062)525-2770~2 (용봉동 현대자동차서비스 옆)

용주점 062)525-2774~5 (용봉동 주민센터 앞)

삼각점 062)525-2776~7 (삼각동 고려고등학교 앞)